

지역소멸의 시대, 행정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금강일보-굿모닝충청 공동 주관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금산다락원 소공 연장에서 개최됐다. 금강일보와 굿모닝충청, 충남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됐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박범인 금산군수 기조연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이 체감하는 소멸 위기는 실로 심각하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금산의 경우 대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지역의 경계로 인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재근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장 발제

발제를 맡은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통합이 만들어갈 새로운 충청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키워드로 수도권 일극체제로 대표되는 지역불균형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몰려있다. 수도권의 국내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15년 이후 7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자생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거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행정 수요와 환경도 바뀌었는데 현재의 행정체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진단했다.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1989년 당시엔 통합보다 분리의 이익이 더 컸던,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기였지만 3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분리보다 통합의 이익이 더 큰 시기다. 대전과 충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분절돼 있어 유사 기능의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충남은 탄탄한 산업 기반과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전은 과학기술의 선도지역으로 각각의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두 지역의 통합은 단

단순한 행정적 변화 아닌 충청권 미래 결정짓는 일 행정통합·규모의 경제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여정

순한 규모의 경제 확대를 넘어 기능 중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의 도약을 (가칭)대전충남특별시의 비전으로 소개하고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9개의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규모화 된 기후탄소중립클러스터·바이오산업클러스터·균형발전복지 등 미래 전략산업 구축을 비롯해 교통망 연계를 통한 60분 생활권 구축과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등 시민 행복 증진 등이 핵심이다.

행정 통합이 현실화 하면 행정 효율화와 경제 통합, 사회적 가치 확장, 정체성 강화 등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확신했다. “중북 행정 해소와 행정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인구 36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전국 3위 경제권 형성, 베이밸리 등 통합 거점 구축을 통한 경제 통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구축과 복지·교육·의료 통합, 권역별 특화전략 등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더 나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행정 통합은 과거로의 회귀 아니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일”이라며 “그간 분리를 통해 분권과 자치 역량을 강화했다면 지금은 성장과 효율,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때다. 정부 주도로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뤄지는 시대는 지났다. 지방이 혁신 역량을 집중시켜 중앙정부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신영호 충남도의회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도 도출되고 있는 만큼 통합 모델 형성과정에 이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0일 충남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패널들이 성공적인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R&D와 제조업의 시너지 기대



■ 강병수 충남대 명예교수

강병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전의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융합하는 데 따른 시너지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대전의 경우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한지 40년이나 됐지만 R&D 역량을 온전히 이전할 대기업이 없어 기반형성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충남의 산업은 대덕특구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며 “행정 통합으로 대전의 R&D와 충남의 제조업 인프라가 결합한다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미래의 경쟁력은 융합에 있는 만큼 충남의 산업역량에 강력한 R&D 엔진이 없다면 경제적 퍼포먼스는 더욱 배가된다는 거다.

강 교수는 또 첨단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미국 텍사스 트라이앵글 사례를 들며 “광역시·도의 통합은 정치권의 선호나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라는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가치, 즉 지방행정의 새로운 이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교수는 다만 최근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작한 메가시티 개념의 충청광역연합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정체성을 섬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대 형성, 전략적 접근 필수



■ 권오철 중부대 초 빙교수

권오철 중부대 초빙교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의 방법론에 있어 유의해야 할 지점들을 짚었다. 권 교수는 우선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두 광역단체가 행정적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단기적인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통합을 위한 자원(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통합 논의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국가정책 의제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돼야 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 통합은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만큼 대신 공약화, 국정과제화, 국회와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지역구 민심을 우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만큼 꾸준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판단이다.

권 교수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구역 통합을 넘어 정치·사회적 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선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다. 단순한 결합이 아닌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략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통합의 실제 구체화 필요



■ 이재경 대전시의 원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경 대전시의원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산업인프라·광역교통망 등을 통한 경제의 규모화 등에 공감하면서 행정통합에 따른 변화의 실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주민과의 공감대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논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용을 오해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 단순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합에 따른 행정 서비스 체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모

형화 하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대전과 충남 두 지자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통합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중복 기능 조정 등에 대해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급한 과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운명이 맞닿은 결과이고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안전장치, 성공의 열쇠



■ 김민수 충남도의 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충남도의원 역시 행정 통합의 선순환 기대효과를 강조하면서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사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각의 강점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규모의 경제화를 꾀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행정 통합의 목표인데 이 목표에 시행착오 없이 도달하려면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다.

김 의원은 “통합 이후 충남도와 대전시의 기능 재배분 과정에서 내포신도시 등 충남 내 행정 중심지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청사 공동 활용 계획이 있지만 실질적 기능이 대전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구·경북의 사례에서 보듯 주민·지역 간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서 이런 이해관계 상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통합 시 충남의 정체성과 자치권이 대전 중심으로 흡수돼 희석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두 지자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권한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lbo.com